

제재에 대한 북한의 정책대응: 2018년 동향 및 2019년 전망

이종규 |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jklee@kdi.re.kr

I. 머리말

2018년 북한은 두 개의 큰 외부충격을 경험했다. 하나는 북한경제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던 2017년 안보리 결의들이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평창올림픽을 시작으로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 북한 역사상 유례 없는 외교적인 대화 국면이 전개되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모순된 상황 속에서 북한 당국도 2018년의 경제정책 기조를 정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실제로 통계, 공식문헌, 고위급 증언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2018년 정책기조는 최근 몇 년에 비해 뚜렷한 색깔을 가지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가까운 예로, 2016년의 경우 본격적인 제재가 시작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속도전을 전개하면서 내부 자원을 동원했고, 2017년에는 유엔안보리 결의안 2321호의 영향으로 석탄 수출이 제한되는 등 대외적인 상황이 어려웠기에 자강력제일주의와 국산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하지만 2018년에는 방향성을 정하기 힘든 상황이 지속되었던 만큼 어느 한 쪽으로 기조를 정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고에서는 2018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대북제재(안보리 결의와 미국의 독자제재) 내용을 살펴보고, 이들이 북한경제, 특히 대외무역에 미친 영향은 어땠는지 파악해보며, 이러한 변화에 북한 당국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공식문헌에 나타난 주장들을 바탕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끝으로 2019년에는 대외환경 변화에 따라 정책기조가 변할 가능성도 있겠지만, 우선 본고에서는 현재까지 나타난 방향성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북한의 정책적 대응을 예측해보고자 한다.

II. 2018년에 적용된 대북제재의 내용

2017년에는 유엔안보리 결의안 2356호(6월 2일), 2371호(8월 5일), 2375호(9월 11일), 2397호(12월 22일) 등 4개의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특히 이 안보리 결의는 2018년 북한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내용들을 포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또한 이 4개의 결의는 과거 6차례의 결의들과 달리 민생부문에 직접적 제한을 가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차별화된다. 그러한 측면에서 본 장에서는 2018년에 본격적으로 적용되었던 안보리 결의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새롭게 적용된 제재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국제사회의 제재가 2018년 북한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고, 이에 북한 당국은 어떻게 정책적으로 대응하려고 했는지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유엔안보리 결의 2356호는 개인 또는 단체를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는 점에서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크지 않았으나, 유엔안보리 결의안 2371호는 차원이 달랐다. 석탄, 철, 철광석, 납, 납광석, 해산물 등에 대해 ‘예외 없이’ 수출을 금지했으며, 신규 합작, 투자, 기존사업 확대 등을 모두 금지함으로써 수출과 투자 모두를 위축시켰다. 그리고 바로 이어진 유엔안보리 결의안 2375호는 섬유수출마저 금지시키는 한편 유류공급을 2018년부터 200만배럴로 제한하고 액화천연가스의 공급도 전면 금지시켰는데, 이는 최초로 민생 관련 부문에서도 수입을 제한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아울러 신규 해외 노동자의 취업 허가를 금지했으며, 합작사업도 전면 금지시켰다. 여기에 공해상 선박 간 이전을 전면 금지함으로써 검색 및 모니터링 절차를 엄격하게 했다. 끝으로 2397호는 앞선 2375호의 내용을 더욱 강화시켰는데, 연간 원유 및 정유 제품 공급을 각각 400만배럴, 50만배럴로 제한하는 한편, 해외에 파견된 노동자들도 24개월 내에 송환하도록 했다. 그리고 의심 선박에 대해서는 검색 및 억류까지 가능하게 했다.

이와 같이 2018년에 새롭게 적용되는 내용들이 많았고, 이에 맞추어 미국의 국내법과 행정명령 수위도 한층 더 높아졌다. 먼저 2016년 채택된 대북제재강화법(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of 2016: NKSPEA)은 여전히 북한을 가장 강력하게 압박하고 있는데, 북한과 석탄, 철, 철광석, 구리, 금, 티타늄, 아연, 희토류, 원유, 식량, 식품, 섬유, 사치품 등을 거래한 개인·단체를 제재 대상으로 지명할 수 있도록 했다.¹⁾ 이때 북한과 거래한 제3국의 개인과 단체도 지명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국내법은 안보리 결의를 실질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북한 해외노동자를 고용하는

1) 이는 안보리 결의가 제재하는 분야가 확대됨에 따라 미국의 국내법인 대북제재강화법도 최근 제재의 범위를 확대하여 적용한 것이다.

제3자에게 제재를 가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들에 의해 생산된 제품은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의 국내법과 함께 행정명령 역시도 제재를 촘촘하게 만드는데, 안보리 결의에서 지정한 품목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며(13570호, 2011년 4월 18일), 이렇게 금지한 행위에 연루된 개인이나 단체의 자산을 동결하거나 입국을 금지시킬 수 있게 했다(13687호, 2015년 1월 2일). 그리고 행정명령 13722호(2016년 3월 16일)는 해외 노동자 송출을 금지하는 한편,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 기업, 은행을 제재할 수 있게 했으며(secondary boycott), 13810호(2017년 9월 20일)는 건설, 에너지, 금융서비스, 어업, IT, 제조업, 광업, 섬유, 운수업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고 북한에 다녀온 선박과 항공기의 미국 입항 및 입국을 180일 동안 금지시키기도 했다.

종합하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안보리 결의를 통해 제재의 수위를 정하게 되고, 미국의 국내법은 금지된 행위에 연루된 개인이나 단체를 지정하게 되며, 행정명령에 의해 입국금지, 자산동결, 교역금지 등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게 한다. 특히 2016년 채택된 대북제재강화법(NKSPEA)은 미국 내에서 직접 법적인 근거를 가지도록 했는데, 2018년 안보리 결의의 적용 범위가 늘어남에 따라 제재의 대상이 되는 미국 국내법의 분야도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를 완전히 해제하려면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정치적인 결단을 한다고 해도 제재를 모두 해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표 1>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 대북제재의 주요 내용

유엔안보리 결의 (2371호, 2375호, 2397호)	미국 독자제재	
	국내법	행정명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 석탄, 철, 철광석, 납, 납광석, 섬유, 해산물 등 전면적으로 금지 - [수입] 정제석유 2018년부터 1월부터 12개월 동안 총 50만배럴로 제한 - [수입] 원유 2017년 12월 22일부터 12개월 간 총 400만배럴 또는 52.5만톤으로 제한 - [수입] 액화천연가스(LNG) 공급 전면 중단 - [검문검색] 의심선박 검색 및 억류 권한 - [투자] 합작사업 전면 금지 - [해외파견] 2017년 12월 22일부터 24개월 이내 북한 국적 해외 노동자 본국으로 송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북제재 강화법] 안보리 결의에서 지정된 품목을 거래한 개인·단체를 지명, 북한 노동자가 생산한 제품 수입 금지 등 - [테러지원국 재지정] 국제금융기구 지원 차단(2017년 11월) - [테러자금지원 위험국가] 개인·단체 지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687호(2015년)] 지정된 개인·단체 자산동결 및 입국 금지 - [13722호(2016년)] 세컨더리보이콧 포함 - [13810호(2017년)] 한 번 이상 중대한 교역(상품, 기술, 서비스) 시 제재, 북한에 다녀온 선박과 항공기 180일 입국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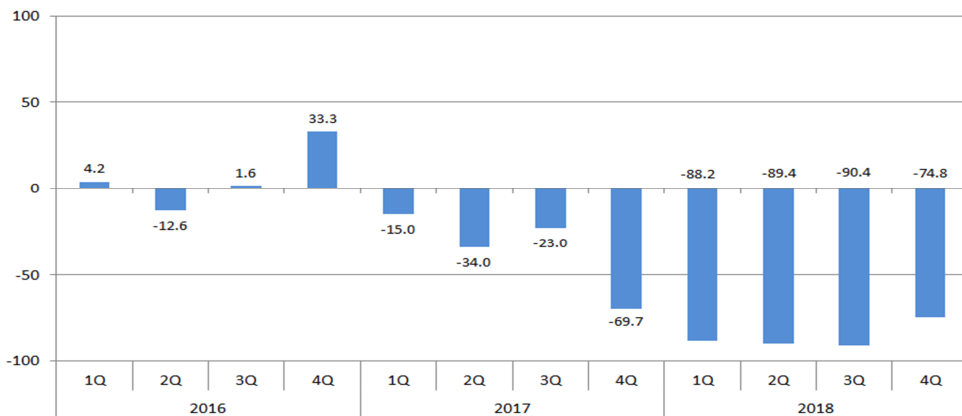
자료: 외교부 보도자료(2017. 8. 6; 2017. 9. 12; 2017. 12. 23); 남진욱(2016); 김중혁·정재만·장윤희·윤광호·김효은(2018); Rennack, D.(2018) 등을 바탕으로 필자 작성

III. 2018년 대북제재의 영향²⁾

앞서 살펴봤듯이 2018년부터 적용된 대북제재는 북한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었다. 이러한 영향은 대외무역을 중심으로 나타났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18년 북한의 대중수출은 약 2억 931만달러를 기록함으로써 전년에 비해 약 87.3%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³⁾ 특히 거의 모든 품목의 수출을 금지한 유엔안보리 결의안 2371호(8월)와 2375호(9월)의 효과가 바로 2017년 4분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2397호(12월)까지 가세하면서 2018년 내내 수출이 크게 위축되었다. 품목별로 보면 이러한 추세는 두드러진다. 2017년 석탄 수출 한도가 제한되기는 했으나(유엔안보리 결의안 2321호), 석탄을 비롯하여 의류, 해산물, 철광석 등 전통적인 품목들이 여전히 상위권에 올라 있다. 하지만 2018년의 경우,⁴⁾ 제재의 범위가 광범위했던 만큼 기존 품목들이 상위권에서 사라지는 대신, 페로실리콘, 텅스텐광, 천연산화마그네슘, 콩류 등 과거에 찾아볼 수 없던 품목들이 많이 수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유엔안보리 결의안 2397호의 영향: 북한의 대중수출 증가율(분기별)

(단위: %)



주: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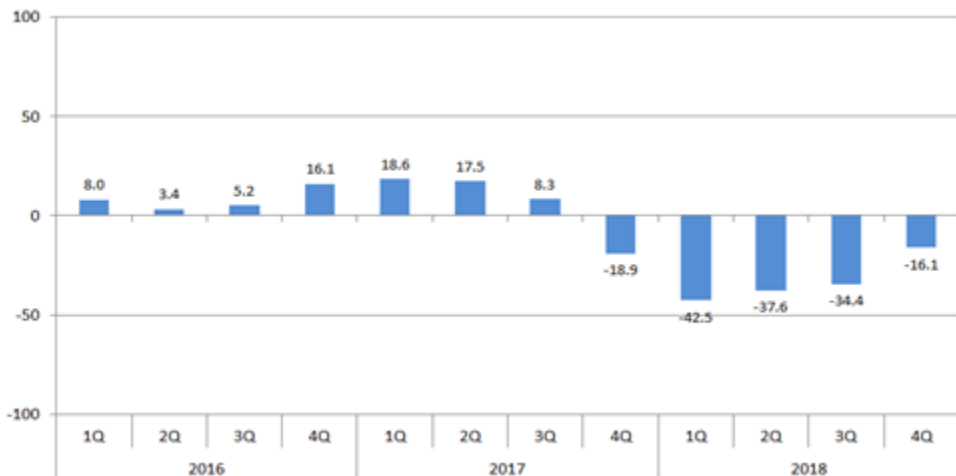
자료: KITA(www.kita.net, 접속일: 2018. 6. 1); 중국해관통계(접속일: 2019. 2. 14).

2) 대북제재가 무역에 미친 영향에 관한 자세한 분석은 본 호의 정형근, 「2018년 북한의 대외무역 평가와 전망: 최근 5년간 북중무역을 중심으로」를 참고하라.
3) 중국해관통계(접속일: 2019. 2. 14).
4) 중국해관은 무역 데이터를 2018년 1분기까지만 발표하고, 이후부터는 발표를 미루고 있다(<http://english.customs.gov.cn/>). 이에 따라 본고에서 말하는 2018년의 실적은 1분기까지만으로 한정된다.

다음은 제재가 북한의 수입에 미친 영향이다. 2018년 북한의 대중수입은 약 22억 3,841만달러를 기록함으로써 전년에 비해 32.7%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⁵⁾ 이 결과가 과거와 비교하여 특이한 것은 그동안 어떠한 제재 속에서도 대중수입은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유지해 왔는데, 이번에는 이마저도 위축되었다는 점이다. 수출 감소의 경우 대북제재가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으나, 수입의 경우 제재에서 직접 언급된 민생 품목이 원유, 석유제품, 액화천연가스 정도에 불과한 점을 고려한다면 수입에는 간접적인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또 하나 특이한 점은, 2018년 1분기 증가율이 -42.5%를 기록한 이래 4분기로 오면서 감소폭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직접적인 제재와 관련이 없는 수입의 경우 감소 추세가 제재 초기에 비해 회복되어서 그렇게 나타났을 수 있다. 물론 2017년 4분기 수입이 과거에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기저효과로 감소폭이 작았던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으나, 2018년 4분기의 수입액 자체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중국 측의 제재가 다소 느슨해지고 있다는 시그널일 수 있다.⁶⁾ 이는 조금 더 긴 추세를 봐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품목을 보면 2018년 1분기까지 대두유, 사과, 밀가루, 황새치, 청어 등 주로 식량과 관련된 물품이 북한으로 많이 들어간 것이 확인된다.

[그림 2] 유엔안보리 결의안 2397호의 영향: 북한의 대중수입 증가율(분기별)

(단위: %)



주: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KITA(www.kita.net, 접속일: 2018. 6. 1); 중국해관통계(접속일: 2019. 2. 14).

5) 중국해관통계(접속일: 2019. 2. 14).

6) 2018년 북한의 대중수입액: 4.1억달러(1분기), 5.8억달러(2분기), 5.9억달러(3분기), 6.6억달러(4분기)

IV. 2018년 북한의 정책대응⁷⁾

그러면 2018년 북한경제는 종합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비록 제재의 효과가 얼마나 컸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존재할 수 있으나, 2018년 제재가 북한의 경제를 후퇴시켰을 것이라는 데에는 경제학자들 간에 이견이 없다. 다시 말하면, 제재가 북한경제에 실질적인 외부충격으로 작용했다는 점에 대해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북한경제가 당장 붕괴할 정도는 아니지만, 적어도 제재로 인해 당국이 정책적인 부담을 가질 수준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무엇보다도 제재가 직접적으로 가해졌던 대외경제부문에서는 큰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특히 외화 획득과 관련해서는 더욱 그러했을 것이고, 상대적으로 제한이 약했던 내수에서는 덜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북한은 외부 측면에서는 제재를 우회하거나 수월하게 외화를 획득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하고자 했으며, 내부 측면에서는 비공식부문을 중심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내수를 최대한 활용하려는 노력을 지속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북한은 제재의 영향을 조금이라도 덜 받는 산업, 품목, 부문에 집중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산업 측면에서는 국산화를 중심으로 경공업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고, 품목 측면에서는 제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제품을 수출하거나 생산할 것을 주문했으며, 내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것이다. 즉, 중화학공업보다는 경공업, 광물보다는 이를 가공해서 수출할 수 있는 가공품, 제재의 부담이 덜하고 경제개발과 관련시킬 수 있는 관광산업, 건설이나 토목을 통한 내수 경기부양, 석탄을 원료로 활용하는 탄소하나화학공업 등이 북한 당국이 정책적으로 택할 수밖에 없었던 선택지였던 것이다.

아울러 북한 당국이 중요하게 관심을 기울이는 또 다른 부문은 거시경제 안정이었다. 제재가 북한경제를 위협했지만, 그래도 거시경제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버틸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물가와 환율의 안정이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따라 단기적 차원에서는 물가와 환율 변동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인 차원에서는 시중에 떠돌고 있는 유희화폐 및 외화를 흡수하려는 방안을 강구하는 노력을 지속했다(이종규, 2017, pp.120~124). 특히 중앙은행은 통화 발행을 억제하는 한편, 금융기관들은 ‘내부예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이 나오고 있다. 즉, 단기 예금보다는

7) 본 장의 주요 내용은 이종규,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북한의 경제정책 대응 분석」, 정책연구시리즈, 한국개발연구원, 2018(출간예정)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장기 예금을 유도할 수 있도록 높은 금리를 제시해야 한다고 하거나, 예금에 대한 인출을 자유롭게 함으로써 주민들이 은행을 신뢰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거나, 현금카드, 신용카드, 전자결제 등을 활성화 하하고자 하는 것들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판단된다. 이는 북한이 시장을 억제하기보다는 적절하게 활용하고자 하는 정책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표 2> 2018년 북한의 정책대응

대응	주요 사례
국산화 (경공업)	<p>“경공업 공장들에서는 주체화의 가치를 높이 들고 우리의 원료, 자재로 생산을 다그치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어 우리 나라의 자원에 의거한 소비품,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내야 한다. 수입병을 없애고 오늘의 현실적조건에 맞게 생산을 정상화하는데서 걸린 원료, 자재문제를 자체로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야 한다.” (리봉남, 김일성종합대학학보, 2018년 제4호, p.130)</p>
제재 우회 (가공품, 관광)	<p>“우리의 가공품들이 수출무역에 대한 각종 장벽과 제재조치를 극복하고 국제시장에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하려면 국제시장에서 수요가 높고 공급이 제한되어 있는 가공품들을 높은 질적수준에서 제때에 개발, 생산하여야 하며...” (장순남, 김일성종합대학학보, 2018년 제3호, p.142)</p> <p>“한 상품의 수출에만 치우친다면 해당 상품에 대한 국제시장수요가 떨어지거나 없어지는 경우 그것은 나라의 수출무역에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된다. 이것은 수출상품의 품종을 끊임없이 확대해나갈 때 수출무역을 안전하게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으며 가공품수품비중을 높이는 방향에서 나라의 무역구조를 개선해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장순남, 김일성종합대학학보, 2018년 제3호, p.144)</p> <p>“우리의 우세한 자원과 능력을 외국의 선진적인 기술 및 자금과 결합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관광제품을 더 빨리, 더 훌륭히 만들어내자는 것이다.” (김충혁, 경제연구, 2017년 제4호, p.54)</p>
내수 활용 (건설, 석탄)	<p>“날로 약해지는 경제봉쇄책동 속에서도 건설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현대적인 건축물들을 일떠세우는 거창하고 방대한 대건설전투를 벌려 나가는 것” (김성철, 사회과학원학보, 2017년 제2호, p.35)</p> <p>“탄소나화화학공업을 창설하게 되면 석탄을 기초원료로 하여 우리에게 없거나 모자라는 원료와 연료를 마음먹은대로 생산보강할 수 있다. 지금 탄소나화화학공업분야에서는 석탄을 가스화하여 합성가스로부터 직접 휘발유와 디젤유를 합성하거나 메탄올을 거쳐 휘발유를 생산하고 있다.” (김영철, 경제연구, 2018년 제2호, p.16)</p>

자료: 이종규,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북한의 경제정책 대응 분석』, 정책연구시리즈, 한국개발연구원, 2018(출간예정)을 바탕으로 재경리.

V. 평가 및 전망

종합하면, 2018년 북한경제에는 제재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출(-87.3%)이 수입(-32.7%)보다 훨씬 더 많이 감소하면서 전체 외화수급 상황에도 부담이 전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비록 대외적 측면에서의 문제가 내수까지 파급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당국이 택할 수 있는 정책적 선택지의 범위가 굉장히 좁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실제로 북한은 외부적 측면에서는 제재를 회피할 수 있는 대체 채널을 확보하고자 노력하는 한편, 내수부문에서는 비공식부문의 자금을 공식적이고 제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수세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 올해 북한은 어떠한 경제정책 기조를 보일 것인가? 이는 대외환경 변화에 따라 매우 달라지겠지만, 일단 현 시점에서는 작년 기조와 비교하여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올해도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경제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2019년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에는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표현이 여러 차례 등장하고 있으며, ‘경제’라는 단어도 총 38회나 언급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형식적인 강조에 불과할 뿐이며, 실질적인 변화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판단해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다. 2019년 신년사에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자립경제에 대한 강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내용에 있어서도 최근 몇 년간의 기조와 비교하여 달라진 바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석탄, 건설 등을 바탕으로 자립경제의 토대를 강화했는데, 앞으로도 그러한 방향을 견지할 것이라고 강조한다거나 기존에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은 과거에도 많이 봐왔던 주장이다.⁸⁾ 향후 에너지부문에 서 자립토대를 마련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대목 정도가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⁹⁾

그보다 현재의 상황에서 북한은 대외부문보다는 내수(시장, 비공식부문)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제주체들의 인센티브를 제고하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자금을 흡수하는 데 더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 보면, 시장은 여전히 효용 가치가 있는 영역이다. 먼저 공급 측면에서는 국영부문이 배급은 물론 상품공급 기능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데 시장은 이를 훌륭히 메꾸어 내고 있으며, 재정 측면에서는 시장을 통제할 경우 재정수입이 부족해질 정도로 의존도가 높아졌다. 한편, 정치적 측면에서는 시장의

8) “자립경제의 잠재력을 넘김없이 발양시키고 경제발전의 새로운 요소와 동력을 살리기 위한 전략적 대책들을 강구하며 나라의 인적, 물적자원을 경제건설에 실리있게 조직동원하여야 합니다.”

9) “올해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 나서는 가장 중요하고도 절박한 과업의 하나는 전력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이는 것입니다.”, “나라의 전력 문제를 풀기 위한 사업을 전국가적인 사업으로 틀어쥐고 여량발전소와 단청발전소를 비롯한 수력발전소 건설을 다그치고 조수력과 풍력, 원자력발전능력을 전망성있게 조성해나기며 도, 시, 군들에서 자기 지방의 다양한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개발리용하여야 합니다.”

확산 자체가金正은 정권에 주는 부담이 크지 않고, 여전히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시장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에만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올해는 우리식경제관리방법의 원칙에 따라 경제주체들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이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방법을 모색하는 노력,¹⁰⁾ 기업의 경영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는 노력,¹¹⁾ 그리고 시중에 있는 유희화폐 및 외화를 흡수하기 위한 노력¹²⁾ 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북한은 올해 대북제재에 대응하여 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이들이 공식부문의 성장을 유도할 수 있도록 경제체제를 정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외적·외교적 환경변화를 차치하더라도 북한에서 이루어지는 수입허가제, 협동구좌제, 신용카드 활성화, 상업은행 육성 등 시장에 대한 공식화·제도화 조치들이 어떻게 진화해 나가는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10) “경제전반에 대한 통일적 지도를 원만히 실현하고 근로자들의 자각적 열의와 창조력을 최대한 발동할 수 있도록 관리방법을 혁신하여야 합니다.”

11) “경제적 공장들이 기업체들의 생산활성화와 확대재생산에 적극적으로 작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경제사업의 효율을 높이고 기업체들이 경영활동을 원활하게 해나갈 수 있게 기구체계와 사업체계를 정비하여야 합니다.”

12) “내각과 국가경제지도기관들은 사회주의경제법칙에 맞게 계획화와 가격사업, 재정 및 금융관리를 개선하며...”

참고문헌

- 김종혁·정재완·장윤희·유광호·김효은, 「미국의 경제제재 완화사례 분석」, KIEP 기초자료, 2018. 10. 24.
- 남진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추가 대북제재 관련 언론보도」, 『KDI 북한경제리뷰』, 2016년 10월호 외교부 보도자료,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 채택」, 2017. 8. 6.
- _____,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 채택」, 2017. 9. 12.
- _____,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 채택」, 2017. 12. 23.
- 이종규, 「북한경제의 달라라이제이션: 원인과 영향」; 이석편, 『북한경제의 변화와 남북한 경제통합 분석』, 연구보고서 2017-10, 한국개발연구원, 2017.
- _____,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북한의 경제정책 대응 분석』, 정책연구시리즈, 한국개발연구원, 2018(출간예정).

<북한문헌>

- 김성철, 「건설의 중요성에 대한 새로운 해명」, 『사회과학원학보』, 2017년 제2호, 사회과학출판사, 2017.
- 김영철, 「탄소하나화학공업을 창설하는것은 화학공업의 주체화실현의 중심고리」, 『경제연구』, 2018년 제2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8.
- 김중혁,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 개발에서 외국투자리용의 특성」, 『경제연구』, 2017년 제4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7.
- 『노동신문』, 「신년사」, 2018. 1. 1.
- 리봉남, 「현시기 경공업부문을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김일성종합대학학보』, 2018년 제4호,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18.
- 장순남, 「대외무역에서 가공품수출비중을 높이는 것은 나라의 무역구조 개선의 중요한 과업」, 『김일성종합대학학보』, 2018년 제4호,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18.

- Rannack, D, E., “North Korea: Legislative Basis for U.S. Economic Sanction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7-5700, June 11, 2018.

<웹사이트>

-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net>, 접속일: 2018. 2. 1).
- 해관통계(<http://english.customs.gov.cn>, 접속일: 2018. 2. 14).